

## 2007년 신년연설

### -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दै지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여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적이라고 하니까 ‘참여정부에도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실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다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 또한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역사의 단절이 없으니까 미래의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먼저 민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민생이라는 말만 들으면 한없이 가슴이 아프고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합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4년 내내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민생도 어렵고, 특별히 취약한 계층의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저는 국민 여러분께 ‘서민 대통령’ 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서민들이 저를 ‘서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민생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 문제는 옛날의 민생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10년 전입니다. 1997년에 1만 7천 개, 1998년에 2만 3천 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요즈음 부도나는 기업이 1년에 3천 개 정도니까 당시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났습니다. 1998년에는 실업자가 무려 1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택시, 화물차, 음식점 개업으로 몰렸습니다. 공급과잉이 됐지요. 택시가 3만 대, 화물차가 15만 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인구 140명에 음식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79명에 음식점 하나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동차 할부금도 낼 수가 없고 집세도 낼 수가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술을 들고 과천 청사에 모인 사연입니다.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돌리면서 2001년 364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작년에는 54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업부도사태라고 한다면, 2002년 신용불량자 위기는 가계

부도사태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던 민생이 다시 한번 무너진 것입니다. 개인이 부도가 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되니 다시 기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걸린 것입니다. 수출 덕분에 기업이 깨어나고 경제도 점차 정상을 찾아 가고 있으나 민생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동산과 주택,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은 늘어나니 서민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민생 문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잘되면 민생도 좀 좋아집니다. 그러나 경제가 잘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이런 정책이 성공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이 많을 때 양극화가 제일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교육비와 같이 격차를 더 벌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사람, 낙오한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정책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노력과 성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책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 문제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오해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파탄’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민생 문제를 만들어낸 책임을 참여정부가 몽땅 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밝힐 것은 좀 밝히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 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반하장 아니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책이라도 내놓으시면 제가 열심히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감

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도 늘어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이런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할수록 어느 한쪽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집값도 교육비도 통신비도 늘어납니다. 모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보통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 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 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풀립니다.

민생 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과탄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언론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언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국민들의 민생이 금방 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생 문제라는 것이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석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

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말하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책임 있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생대책이 채택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경제만 잘된다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기본입니다. 경제가 잘되어야 나머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민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경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용어의 혼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정책과 경제정책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정책, 단기적인 거시경제의 운영은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 경제정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말할 때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사회환경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치·사회·문화 정책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팀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당일의 컨디션도 좋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기술과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길러야 하고, 잠재적인 선수층, 훈련환경, 경기장 시설이나 경기 운영시스템, 수준 높은 관중 등 주변환경도 좋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만을 가지고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경기상황을 마치 경제의 전부인 것으로 전제하고 경제를 단정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경제를 거시경제, 성장잠재력, 더 좋은 경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관리, 거시경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경기정책만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어느 때는 ‘인위적 경기부양 안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근히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다가, 어느 때는 ‘선심성 경기부양’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부양을 비난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헛갈리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대한 해석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동이 경제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알면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부양책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만 원칙을 벗어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검증된 거시경제 수단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무리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골병이 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3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땅값 폭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1992년 대규모 경기 불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부실기업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도 이러한 불황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취

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고,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쌓이다가 결국 4년 뒤 외환위기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 1999년에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가계대출, 길거리에서 카드 파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방치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2002년 우리 경제는 7% 성장했지만,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졌고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채 사태로 가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접대비가 50만 원이 넘는 경우 명세서를 내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무슨 짓하는 것이냐는 저항이 많았습니다. 성매매 산업 단속 때에도 경기가 다 죽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건설경기의 위축을 들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버틴 것이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효과가 지금부터 나올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북핵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284만 명으로 정상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어



면 달에는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고, 소비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 빌리는 데 붙은 가산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서 사실상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중단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건이 터졌고 90조 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과잉대출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은행들을 강제할 수단도, 더 투입할 공적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는 2004년 4월 382만 명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 말 283만 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비도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정부에는 이런 위기와 부담을 넘겨주지 말자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때문에 금융이 어떻게 된단는지 환율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장관들께서 나와 계시지만 정부 전체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물려 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파탄’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억울합니다.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입니다.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간 경상수지 흑자 합계가 6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가가 경제의 가장 정확한 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에서 지금 1,400선으로 두 배를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3.6%

에서 3%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로 무너졌던 현대건설, 하이닉스, LG카드, 대우건설 등 부실기업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원유 가격은 배럴당 24달러에서 60달러 선으로 2.5배 가까이 급등했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에서 평균 94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악조건을 딛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런 성과입니다. 야당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런 성과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국민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제를 두고 ‘경제파탄’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를 빗대어 ‘차라리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권이 낫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3년 GDP 성장률은 3.1%입니다. 그 이후는 4.7%, 4.0%, 5.0%입니다. 지난 4년간 평균은 4.2%입니다. 평균 4.2% 성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입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인 5%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도 곧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갑니다. 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입니다. 우리는 올해 말에 2만 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가 6%, 7% 성장 안한다고 아우성치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성장률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한다면 한국 경제는 영영 파탄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경제를 아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나 공약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위기’ 라거나 ‘파탄’ 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 투자할 사람 투자 안하고 소비할 사람 소비 안하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2004년에 위기, 파탄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장된 평가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데 일조를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못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반론한 것은 이런 심리적인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꾸 위기, 파탄 하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파탄 아닙니다.’ 했다가 딱이 났습니다. 야당한테도 엄청나게 맞았고, 언론한테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분들한테야 제가 밤낮없이 맞는 게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맞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내가 이렇게 고달픈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가 나신 것이지요. 제가 조금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해도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이래 일부 정치인들과 유력 언론이 우리 경제에 끝없는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꾸역꾸역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 그야말로 1997년 우리 경제를 파탄 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무책임하게 우리 경제를 혼드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참으로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경제위기론이 가장 심했던 2003년과 2004년에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시중에는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다.' 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5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외국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한국 투자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고 계속 신문에 기사 쓴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본 만큼 좀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의 마당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주도형 산업정책, 과학기술 혁신체계,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혁신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세계 일류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유출되는 환경이 아니라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교육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야 합니다.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각종 보조와 지원정책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히 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여 주면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급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의 기준으로는 사치스럽게 생각되던 소비도 이제는 소비시장의 활력을 위해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해외소비가 늘어나면 국내소비가 위축됩니다. 국내소비의 확대를 위해 교육·의료 등 소비가 해외로 몰리고 있는 고급 서비스 시장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금융, 물류 등의 동북아 허브 전략이 그 하나입니다. 지구경제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시장도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시장은 닫아 놓고 남의 시장만 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전략 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보호만 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개방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의 개방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못해 개방하는 시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나가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만 개방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자본을 해외에 투자해야 합니다. 환율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의 과실이 한국 경제로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기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노사관계를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도 안정되게 공급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인적자원 공급도 준비해야 합니다. 보육정책을 잘해서 여

성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병역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출산율 높이기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영주권·시민권 정책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경제정책, 잘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으로서 국민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참여정부가 이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이 아니라 기술과 인재 중심의 질적 발전전략,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앞서가는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서가는 경제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새것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연구개발 예산은 2002년 6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60%가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7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했습니다. 효율이 10% 높아지면 예산을 10% 늘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여 이공계 출신 우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5급 기술직 채용 비율이 2002년 23.5%에서 2005년 50.4%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기업의 박사급 연구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국가기술혁신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6위로 평가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 한 분이 한국이 세계 7대 기술강국에 들어갔는데 왜 자랑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7대 강국까지 왔느냐고 물었더니 여러 평가들 종합하면 7대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딱 7등이라고 이름 매겨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 꺼냈다가는 큰 코 다치겠지요. 하지만 대략 그쯤 갔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민정부에서도 많이 했고 결정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의 나노기술 투자, IT 광대역 통신망 확충, 이런 것이 오늘날 IT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여정부는 뭐 했느냐? 우리는 10대 성장동력이 있습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제2의 CDMA 신화로 불리는 DMB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로봇도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2년 29억 달러에 불과하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에는 열 배가 넘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조선 1위, 반도체 3위, 전자 4위, 자동차·철강 5위를 점유하는 등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출 3천억 달러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국민의 정부에서 토대를 놓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를 내려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경유착도 없고, 관치경제도, 관치금융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청와대에 대출 좀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식회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보조와 지원정책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하였고, 한·ASEAN, 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3월경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걱정되는 것은 농업입니다. 119조 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발전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돈을 받아쓸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농업은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책임져 가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참여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는 111일이었는데 지난해는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노사관계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 주는 좋은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보육지원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처음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해외동포의 방문취업의 길도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제 개편도 연구하고



있고, 병역제도 개편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선심성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인적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 개발’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뛰었습니다. 1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원 정상외교를 펼쳐 우리가 투자한 석유·가스 자원 확보량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2.7배 확대시켰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예산도 2002년 2,800억 원에서 올해 9,2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아직도 규제가 많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제 숫자를 가지고 규제가 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나친 규제철폐가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노동보호를 위한 규제,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늘린 것도 있지만 관료적 규제는 많이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수가 아니라 규제로 인한 시간과 비용입니다. 건수 위주의 규제 개혁이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편적인 규제 건수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여러 부처와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7개의 덩어리 규제 개혁으로 총 2조 21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경제원리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경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경제

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이 안정된 나라라야 활력 있는 경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질병과 노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되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이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신뢰의 수준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균형 잡힌 사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 복지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적자원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통합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에는 자유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유와 창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꽃이 핍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다음으로 안보와 평화입니다.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에 매달려 온 이유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정성을 들여 왔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누는 낡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만 멀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은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경제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와는 별개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정책만 가지고 보아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안보를 정권유지에 이용하기 위해 위협을 부풀리고 불안을 부추겼던 시대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닙니다. 경제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분배와 성장은 함께 가야 합니다. 조화롭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투자정책,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안보정책, 정부혁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은 경제는 경제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 종합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한 사회투자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질병과 노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투자가 사회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연간 20%씩 복지재정을 늘렸습니다. 정부예산 평균 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천억 원에서 2007년 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 원에서 2007년 6,7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올해 13만 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매월 20만 원씩 확대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천 명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 명에게 매월 8만 9천 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국력이고 핵심적인 성장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

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은 참여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사무소' 수준에 머물렀던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45%, 이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78%나 증가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난해 8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돈 주면 일자리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일자리를 발굴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가 총동원돼서 지난 2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실업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 예산만을 늘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행정인력을 대거 복지담당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도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 인력은 확충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1,800명 늘렸고, 소방인력도 17%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교육, 환경, 문화, 체육 모든 것이 투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조금 전에 참여정부가 투자를 좀 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새 밭의 피다.' 이 말씀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문민정부는 3.2%, 국민의 정부는 5.6%였습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05년에는 8.6%입니다. 이것은 미국·일본의 절반이고, 유럽의 1/3 수준입니다. 절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유럽의 1/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는 가지는 것이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 2030의 목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 이 우리 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 관한 한 작은 정부를 얘기하면 안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해도 좋지만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정부가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유럽에서 복지 지출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담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줄이자고 해서 작은 정부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유럽의 1/3도 안되는데 무슨 작은 정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작은 정부라는 말을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복지 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

할 수 있으나 복지 지출이 유럽의 1/3 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지출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해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얘기 접어놓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균형발전, 일자리,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하나하나가 전략과제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수십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서 답답한 것이지요.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은 대세입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기계파괴운동이 있었지만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증명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도 컴퓨터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은 확실하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개방을 반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역사의 대세를 탈 수도 없거니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한번 떠맡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진보세력은 절대로 주류가 되지 못

합니다. 초기에 FTA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론이 무성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남은 것은 농업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은 교역가능성이 낮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고 1/3은 경쟁 대상입니다. 나머지 1/3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쌀은 WTO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FTA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1994년 WTO 가입 문제로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혀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리를 걸고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지켰습니다. 세계의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은 WTO에 가입하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개방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예언이 나왔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FTA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KTV를 봤더니 나프타(NAFTA)가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오는데, 이전에 MBC, KBS에서 특집보도 본 것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이미 민생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극화는 광의로 말하면 소득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방 간,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양극화정책은 이 모두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작은 정부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입니다.



균형발전은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선진국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때문에 보상금 나가서 부동산값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도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에 보상금으로 61조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전부 균형발전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나간 보상금은 3조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서울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보상과 부동산 가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의 실태가 어떻다는 얘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양적으로만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그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유발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억 원 생산할 때 1996년에는 56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금은 32명의 일자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지금 고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7%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는 집중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회의를 열 번쯤 직접 주재했습니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은 지금 잘된다고 하는데 보통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경쟁사회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이 혁신주도형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혁신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 4년간 네 배 가까이 늘려 왔습니다. 올해에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13% 정도 됩니다. 선진국이 우리의 소득수준과 비슷했을 때 2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3개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0만 개 정도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부가 공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학력사회에 맞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물류·법률·회계·디자인·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와 보건의료·교육·문화 등 고급 서비스를 산업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금융허브·물류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합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조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률로 인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 좋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

했습니다. 지금 나쁜 조짐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큼니다. 좀더 노력해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또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질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채택하지 못했던 모든 강력한 정책들을 이번에 다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투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공급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 공공 부문이 위축되는 만큼 다 짓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 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정책으로 지금까지는 주택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주거복지정책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조금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많아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유동성 관리를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43.4%가 오르고, 국민의 정부 때는 33.8%가 올랐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19.7%가 올랐습니다. 실감이 잘 안나시겠지만 실제로 통계는 19%가 맞습니다. 평균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에 못잡았냐? 반대와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반밖에 못하고, 절반만 해놓으니까 효과 없다고 계속 흔들고, 아무도 안 믿고 집을 사니까 또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점

점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신문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집값이 안 올랐으면 더 강력한 정책이 안 나왔을 텐데 너무 많이 흔들여 가지고 참여정부 정책을 전부 무력화시켜 버리고 나니까 더 센 정책이 나와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 버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문들은 자승 자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입시 부담, 성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부모님들은 사교육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층이동의 기회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교단이 붕괴했다는 말도 들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초·중등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학업능력에 대한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입시가 문제입니다. 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학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 서열화가 아니라 적절한 차별화를 통해 학연사회의 폐단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신과 교단의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경쟁과 평가를 받아들여 자질 향상의 기회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다양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혁신방안은 이미 발표했습니다. 올 3월부터 교육방송에 영어전용채널이 생기고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됩니다.

대학교육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특성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대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방대학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안보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에 관해서는 하나하나의 정책을 일일이 설명하는 대신에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켜 온 몇 가지 원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알면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

다. 속이 좀 상하더라도 참으면서 신뢰를 쌓아 가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속지 않기 위해 온갖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일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포용은 설사 상대가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낭패를 보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진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역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용정책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뜻입니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주국가로서의 체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관계,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소 작전통제권은 돌려받았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꺾데기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19공동성명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차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

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저런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보를 전략에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 당선에 나도 생색을 좀 내고 싶었으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도 돈 주고 샀느냐고 헐뜯는 나라에서 본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덮어 버렸습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을 모으는 것만큼 수지맞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인은 성공하더라도 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북 퍼주기, 친북 정권, 이런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20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돌변하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전략적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



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2000년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말라든가 정상회담을 하면 안된다든가 하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될지 안될지도 알 수 없는 차기 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대통령과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제가 차기 주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작전통제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신의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모든 안보정책은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정부혁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조직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공직사회의 질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직접 행정 각부와 협력하여 실행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해 그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혁신수석실을 두고 혁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혁신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혁신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약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특허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포상을 받아서 내부에서 기관장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부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혁신성과가 각 부처의 혁신 브랜드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산되어 기관·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 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환율 덕분 아닙니까?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이고 우리 국민이 이룩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가 이전과 다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입니다. 또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 남북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 여덟 가지입니다. 이 전략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전략으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거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있고, 선생님, 노동자, 농민, 일부 중소기업들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혁신은 혁신주도형 경제와 정부혁신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능동적 개방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반성장은 경제발전,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모두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평의의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방 간,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반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중에서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사회투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의 동북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임

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천 달러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은 8.6%에서 21%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연설의 핵심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 과 '선제 투자' 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 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얘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혁의 속도입니다. 뒤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1984년에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산아제한 시절에 만든 여러 제도가 최근까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다급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4대 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한·미 FTA가 부담이 되는 마당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전선의 확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국민들도 피곤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도 같은 것입니다. 해야 될 개혁은 제때 해야 미래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헌법을 직선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헌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지금까지 하자고 해온 내용을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까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병어리가 돼 버렸냐는 것입니다.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공당이 그러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입니다.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진 것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입니다. 꾸벅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차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겐 유·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개헌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노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다고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대통령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로드맵정부, 나토정부, 아마추어정부, 국정실패, 국정파탄, 총체적 파탄 등 온갖 야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변화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 정책과 그 성과에 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입니다.

참여정부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 건설입니다. 경제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 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항쟁 이후 시대적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 2단계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민주주의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민주주의 3단계입니다.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됐습니다. 3단계 과제입니다. 2단계까지는 제가 대강 마무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 이후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공약했습니다. 후보가 되기 전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거과정에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이 떳떳한 사회, 그리고 개혁과 통합, 새로



운 정치'와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 후 인수위 시절에는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정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저는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노사모의 참여운동은 돈선거, 부정선거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 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공천장사'라는 부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도와 기초단체장 공천제도가 결합해서 경쟁 없는 선거를 낳고, 경쟁 없는 선거가 공천장사를 낳은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군·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

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었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대권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고 하지 말고 차기 후보라고 용어를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 달라 안하고, 청탁도 없어서 속이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번 보

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나 나올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 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할 때 또 무슨 잡음이 있을까 지켜보았으나 아무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달이나 입찰 등에도 권력형 부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라는 말도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특검하자는 말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습니다.

권력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

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6월항쟁 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그런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분당이 아닙니다. 19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 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정,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0이 된 1984년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날 다급해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1994년 WTO에 가입할 당시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미래의 과제를 꺼내 준비를 했습니다. 혁신주도형 정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미래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비전 2030'입니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과거사 정리 또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사법부가 인혁당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독재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 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아 온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용산기지 이전, 국방개혁, 전시 작전통제권 이관, 방폐장 부지 선정,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철도공사 적자문제 등 20년, 30년 동안 공약만 하고 미뤄 온 일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나라가 시끄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끄러운 것은 야당과 언론의 시비와 대통령의 반론이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좀 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너무 힘이 없다. 강력하게 좀 하라.’ 는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출발 첫째 여당의 의석이 4분의 1이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대의 국회는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도 하는 일마다 역풍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밀려 있던 개혁과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를 시작했을 때,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개헌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질서가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권력도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잡아넣지도 않았고 고문하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원칙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 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역사의 평가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사입니다. 위로의 인사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저 감사하다는 대답을 했을 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말년이 반드시 그분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참여정부도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들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안했던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1년에 상황을 바꿀 만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역사의 평가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열정과 성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